미국 : 직업 불만족도 사상 최고치 기록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직업 불만족도가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 응답자의 60%는 일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33% 정도만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보다 낮은 수치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자의 50%가 매일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일과 관련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갤럽은 노동시간이나 일·생활 균형 등 노동조건뿐 아니라 불공정한 대우, 과도한 업무량, 불명확한 의사소통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불만족도가 높다고 보았으며, 그 핵심에는 관리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나 팀 리더가 노동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갤럽의 작업장 관리 및 웰빙 부문 수석연구원인 짐 하터는 관리자의 역할이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하여 노동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직원 개인의 강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처우와 보상, 적절한 업무량 및 세심한 관리와 명확한 의사소통 등 직무만족도를 제고하는 작업장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 관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자에 대한 기대치를 재정의하고 적절한 훈련 및 자원, 평가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갤럽 조사는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 및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가 노동에 적극적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3% 높은 수익을 내며, 이직률 및 결근을 낮춤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직원 및 고객 충성도 모두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1) CNBC, “Job Unhappiness is at a Staggering All-time High, According to Gallup”, 2022.8.12.

미국 : 벤처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우군이 될 수 있을까

문학 및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 PEN 아메리카에서 노조가 조직될 당시, 노조는 “유닛 오브 워크(Unit of Work)”가 법적 측면 및 의사소통과 관련해 도움을 준 점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유닛 오브 워크는 실리콘밸리 벤처자본가들의 후원을 받는 스타트업으로 기존의 노동단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원자화되고 침체된 현재 노동운동 환경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동력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1]

새로운 수익 모델은 유닛 오브 워크 활동가들이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여 투표, 계약 협상 전략 및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노조 조직원이 월 회비 납부를 통해 이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닛 오브 워크의 설립자인 제이미 얼 화이트는 MIT 대학원 재학 당시 캠퍼스 청소부의 연대 캠페인 조직에 도움을 준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의 관심사는 (온라인) 테크 및 조직 기술을 노동운동에 접목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닛 오브 워크는 향후 10년간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을 2003년의 8.1%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이다(현재 6.1%).

현재 노조 가입률이 낮은 데 반해 미국인의 68%가 노동조합에 우호적이라는 점은 향후 노조조직화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진보매체 자코뱅은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조직화에 힘을 쏟기보다 방어적으로 조직을 지키는 데 몰두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새로운 노조 조직에 있어 기존 노조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데, 제이미 얼 화이트는 대형 노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닛 오브 워크의 모델은 단순히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설립뿐만 아니라 기술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구축 자금을 빠르게 모으는 방식을 포함한다. 또한 향후 수익으로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노조에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조직 운영 기반을 금융 투자자가 아닌 노조 기반에 두려 한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유동성 리스크와 함께 기술 투자자들 중 대형 노조에 반감을 갖거나 노조 분권화(독립 노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등 여러 우려사항이 있지만, 유닛 오브 워크는 더 많은 노조를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여를 강조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 Los Angeles Times, "The Organized Labor Movement Has a New Ally: Venture Capitalists", 2022.8.12.

미국 : 스타벅스, NLRB를 선거 부당 개입 혐의로 고소[1)]

미국의 커피 체인 스타벅스 사의 반노조 캠페인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를 직접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NLRB가 노조와 야합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선거를 조작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회사가 이에 관한 정보를 NLRB 내부관계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혀 주의를 끌고 있다. 스타벅스는 총 16쪽에 달하는 소장을 통해, 당국이 당사의 주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우편투표를 잠정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SWU)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현재 2022년 8월까지 총 9천여 개에 달하는 스타벅스 직영점 중 220개 이상의 지점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실시

되었고, 투표가 실시된 곳 중 80%에서 찬성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스타벅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NLRB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0개에 달하는 노조 조직화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보고되었다. 당국은 회사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는 2022년 4월 실시된 캔자스 주의 오버랜드 파크지점의 선거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다룰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소장에서 NLRB의 세인트 루이스 지부가 특정 노동자들에게 현장 투표를 허용하거나 개별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정보를 누설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NLRB의 부적절한 행위가 오버랜드 파크 지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NLRB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면서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Bloomberg Law, “Starbucks Dials Up Anti Union Heat by Accousing NLRB of Collusion”, 2022.8.16.

미국 : 캘리포니아 주, FAST Recovery Act 상원 투표 임박[1)]

“최저시급 15달러 시위(Fight for $15)”가 미국 전역을 휩쓴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은 저임금, 미흡한 안전관리, 성희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와 하버드 시프트 프로젝트 팀이 협업한 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다른 주 서비스 섹터 노동자에 비해 연간 6천 달러 정도를 적게 벌고, 그들의 업무 스케줄 역시 더 불규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1월 AB 257, 혹은 FAST Recovery Act 이라 불리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주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주 보건 및 노동당국에서 지정한 인물과 요식업 전문가, 패스트푸드 노동자, 노조 측 대표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와 피자헛과 같은 기업들로 하여금 개별 지점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설령 해당 지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문별 교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대체로 개별 회사를 넘어 전 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두고 교섭한다. 이러한 교섭 구조는 파트타임, 계약직,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교섭 구조가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캘리포

니아 주에서는 FAST Recovery Act를 통해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안의 파급효과는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미 요식업협회(NRA)는 공개된 로비 문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 오리건, 워싱턴, 일리노이와 같은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조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파업, 청원, 로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국 거대 노조들의 위원장들이 개빈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FAST Recovery Act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비록 캘리포니아 주는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 주이지만, 뉴솜 주지사는 2021년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를 수월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법안은 다가오는 2022년 8월 주 상원에서 전체 투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엔 주 의회의 재승인을 거친 다음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1) Vox, "California Could Transform How Fast Food Workers are Treated", 2022.8.15.

미국 : NLRB, 노조 휘장 착용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판결[1)]

지난 2017년 테슬라는 전 직원들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테슬라 노조 조직을 시도하고 있었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해당 정책이 노동자가 노조 휘장을 부착하거나 착용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당사의 복장 규정은 직원들의 통일되고 단정한 복장 유지 및 차량 손상방지 차원이라고 대응했다.

그 이후 2022년 8월 29일 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이러한 테슬라의 복장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NLRB는 기업은 직원의 복장에 개입하는 경우 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한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NLRB가 2019년 월마트 사례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월마트는 고객 만족, 재산 손괴 방지 등을 이유로 판매대에서 노조 표식이 달린 의류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NLRB는 당시 이 정책이 미국 「국가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월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이후 미국 전역의 사용자들이 노조와 연관된 일체의 복장 및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1) CNN, "Tesla Must Allow Workers to Wear Clothing Supporting Union", 2022.8.30.

미국 : 철도노조 잠정적 파업 철회

미국의 철도노동자들은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파업할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되며 파업 위기가 발생하면 대체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동안 미국 철도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 체불, 살인적인 스케쥴 등 여러 악조건에 시달려왔다. 특히 지난 2022년 2월 BNSF Railway는 "Hi Viz"라고 불리는, 이른바 "출근점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출근을 제때 하면 점수가 누적되지만 한 번이라도 결근을 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조는 이 정책이 직원들의 유급 병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1)]

이에 미국의 철도노조들은 2022년 9월 16일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냈다. 여기에는 총 6만 명를 대표하고 있는 두 노조[2)]와 더불어 다른 소규모 노조도 포함해 총 12개의 노조가 엮여 있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총 11만 5,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두 노조는 국가중재위원회의 중재안도 거부하는 등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여객철도 운영기관인 암트랙은 지난 2022년 9월 12일 파업에 대비하여 일부 장거리 노선을 취소시켰다.[3)]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류 대란을 넘어서 인플레이션 악화, 나아가 미국 경제 전반에 불러올 연쇄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노조와 사용자 간 적극적인 중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잠정적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미국 노동부 마티 월시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개입한 무려 20시간에 달하는 대장정이었다. 해당 합의안이 인준되면 노조원들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체불임금 지불과 더불어 임금의 14% 즉시 인상, 그리고 2024년까지 총 24%까지 인상되는 임금합의안 및 매년 1,000달러에 달하는 상여금도 받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노동자는 각각 총 1만 1,000달러를 얻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합의를 두고 "미국에게 큰 이익(big win for America)"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4)]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노동자들의 인준을 받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1) VICE, "The Worst and Most Egregious Attendance Policy is Pushing Railroad Workers to the Brink", 2022.4.5.
2) 이 두 노조는 the Brotherhood of Locomotive Engineers and Trainmen Division of 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heet Metal, Air, Rail and Transportation Workers – Transportation Division, and the Brotherhood of Railroad Signalmen를 의미한다.
3) The Washington Post, "Amtrak Cancels Some Long-distance Trips as Freight Strike Threat Looms", 2022.9.12.

4) CBS News, “A Big Win for America”: Biden Announces Tentative Deal to Avert National Rail Strike”, 2022.9.15.
5) Reuters, “U.S. Railroads, Workers Avert Shutdown, But Work Remains to Finalize Contract Deal”, 2022.9.15.

미국 : 자동화 문제, 항만 노사 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올라

미국 70여 개의 해상운송기업 및 해상터미널 운영기업을 대표하는 태평양해상협회(PMA)와 서부 해안 부두노동자 약 2만 2천 명을 대표하는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간의 재계약 협상에서 로봇화 및 자동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1] 두 조직은 7월 1일 만료된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5월부터 협상을 끌어왔는데, 최근 발생한 공급망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측 모두 협상 타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가 작업 선적 및 하역 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부두노동자들은 로봇이 미국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무인 차량, 자동 적재 크레인 및 기타 로봇 공학이 여러 항만 터미널에 도입되면서 트럭 및 지게차 운전기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아직 전세계 컨테이너 터미널의 4% 정도만 일정 수준 자동화된 상태이지만, 2040년까지 부두 작업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노조는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그 혜택은 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연구소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은 두 곳의 자동화된 터미널의 손실 작업량을 계산했는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20~2021년에 걸쳐 연간 572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나마 노조에 가입한 부두노동자는 해고되지 않았고 담당업무도 여전히 많지만, 다수가 프리랜서인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에 반해 해운업계는 연휴 등 바쁜 시기의 공급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해운업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자동화가 컨테이너 업무 처리를 2배가량 빠르게 완료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했다고 본다. 나아가 자동화된 해상 터미널에서 부두노동자가 더 많은 업무와 훈련을 통한 기술향상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에서 주장하는 자동화 터미널의 컨테이너 처리 증가가 자동화가 되지 않은 터미널의 몫을 희생하여 나오게 된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는 고용 손실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

1) NPR, “Before the Holiday Season, Workers at America’s Busiest Ports Are Fighting the Robots”,

2022.9.11.
2) Port Technology, “West Coast Ports and Unions Clash on Automation ahead of talks”, 2022.5.13.

독일 :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소매업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독일상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소비지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매업계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방통계청의 6월 매출 발표에 의하면 소매업계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8.8% 감소한 것으로 1994년 이후 최대폭의 매출 감소에 해당한다. 식료품 업계의 매출 또한 2016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꾸준히 성장하던 인터넷통신판매업의 매출도 전월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다만 주유업계의 매출은 정부가 6월부터 시행한 주유할인 정책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6.4% 상승했다.[1)]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7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5.7% 상승했고, 식료품 가격은 14.8% 상승했다.[2)]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5% 상승,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0.9%로 나타났다. 독일 내 인플레이션은 지난 두 달 동안 정부의 “9유로 대중교통 티켓” 도입 및 주유할인 정책에 따라 약하게나마 억제될 수 있었으나,[3)] 해당 정책이 종료된 8월 말 이후의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심리의 약세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4)]

1) Tagesschau, “Umsatz des Einzelhandels bricht ein”, 2022.8.1.
2) Tagesschau, “Inflationsrate erneut leicht gesunken”, 2022.7.28.
3) 5월과 6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7.9%, 7.6% 상승했다.
4) Tagesschau, “Tankrabatt und 9-Euro-Ticket dämpfen”, 2022.8.10.

독일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발표, 시민수당 윤곽 드러나

신호등 연정의 연정협약에서 기존의 하츠IV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안되었던 "시민수당" 제도의 초안이 발표되었다.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노동부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시스템의 관용적인 운영으로 급여 수령자가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1)]

이번 안에 의하면 새로운 시민수당은 하츠IV에 비해 완화된 제재와 기초생활급여 산정방식의 변경이 특징이다. 제재방안 개선과 관련하여, 시민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6개월의 신뢰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직업센터와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급부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직업센터에 전혀 협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산정방식에서는 급여를 적절히 인상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는 직전 2년간의 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결정되었는데, 하일 장관은 이러한 방식이 현재와 같은 물가상승 시기에는 급여 인상을 지연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추후 연방통계청의 계산을 기초로 연정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개편안은 급부수령과 관련된 주거 및 재산 보유 제한을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급부 수령자의 재교육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연정파트너 중 자유민주당은 하일 장관의 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이다.[2)] 크리스티안 린트너 당대표는 시민수당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득이어야 한다며 기존 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기초생활급여는 기존 절차를 통해서도 인상될 것이라며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에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하일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특별 지출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수당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수당 법안은 9월 제출 후 가을 내 의회를 통과하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3)]

1) Tagesschau, "Wie das neue Bürgergeld aussehen soll", 2022.7.20.
2) Tagesschau, "Lindner kritisiert Heils Bürgergeldpläne", 2022.7.22.
3) Tagesschau, "Worüber sich die Ampel streitet", 2022.7.22.

독일 : 전문인력 부족 직업군과 성비 불균형[1)]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연구소(IW)가 실시한 연구 결과는 성비가 불균형한 직업일수록 전문인력이 더욱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독일 경제의 주요 해결 과제에 해당한다.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의 수는 약 5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사회복지, 보육, 간병, IT 및 수공업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 분야의 경우 약 2만 600명가량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아동보육 분야 역시 약 2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건축전기설비, 배관공, 보일러공, 공조기술자, 자동차정비공과 같은 수공업 기술직은 2021년 약 8만 7천여 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했다. 여성 비율은 배관공, 보일러공, 공조기술자의 경우 겨우 0.4%에 불과하였고, 자동차정비공의 경우 4.5%에 불과하였다.

이들 직업을 포함하여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극심한 10개 직업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직업군은 성비가 현저히 불균형하여 소위 남성 직업 또는 여성 직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10개 직종 중 5개는 여성 비율이 76.6%를 차지했다. 나머지 5개 직종은 정확히 반대의 성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각 직업별 성비 불균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이 전문인력 부족 현상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연구소의 연구는 직업 선택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 시기에 직업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한 성별을 겨냥한 적극적인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집중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에 불과하다. 즉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실질적으로 직업적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연구는 부족한 성별의 채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기업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등과 같은 채용 대상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 인력만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 산술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1) IW-Köln, “Fachkräftemangel: Größte Lücken in typischen Männer- und Frauenberufen”, 2022.8.12.

독일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병가 진단서 전화 발급 재개

독일의 급여계속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근로 불능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다음 근로일까지 질병으로 인한 업무 불능 상황과 예상 업무 복귀 기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제출은 적어도 병원을 방문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수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진단서를 전화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간 지속되었던 전화 진단서 발급 제도는 감염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시행이 중단된 바 있다.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 7일까지 병가 기간이 인정되는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독일 의사·보험·병원 연방 공동 협의회(G-BA)는 이번 유선 진단서 발급 재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치 않은 위험을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를 위해 많은 환자들이 대기실에 모여 새로운 감염 상황을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취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G-BA 회장 요제프 헤켄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동시에 9월부터 감기와 독감 유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현재 화상 진단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발급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Welt, "Telefonische Krankschreibung wieder möglich", 2022.8.4.
2) BMV-Ä §31.

독일 : 8월 물가상승률 7.9% 기록, 연방정부는 3번째 부담경감정책 발표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8월 물가상승률을 전년동월대비 7.9%로 발표했다. 이번 물가상승은 여러 달 동안 지속된 에너지 및 식료품의 가파른 소비자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8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35.6% 증가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평균 16.6% 증가하여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육류 및 육가공품의 가격은 18.6%, 빵 및 곡물가공품의 가격은 17.1% 상승했다.[1)]

연방정부는 9월 초 "아무도 혼자 남게 하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최소 650억 원 규모의 3번째 부담경감정책을 발표하며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2)] 이번 정책은 전기요금 규제, 연금생활자와 학생에 대한 에너지지원금 지급,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난방지원금 그리고 새로운

시민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3)]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10월부터 12유로로 인상되는 법정 최저임금과 유로약세 현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본다.[4)] 연방은행은 가을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에 달할 것이며 겨울철에는 경기침체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ifo연구소는 2023년 초까지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약 11%까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2023년 평균적으로는 9.3%의 물가상승률이 예측된다고 밝혔다.[5)]

1) Tagesschau, “Energie und Nahrung treiben Inflation”, 2022.9.13.
2) Der Spiegel, “300 Euro für Rentner, 200 Euro für Studierende, Nachfolge für 9-Euro-Ticket”, 2022.9.4.
3) Tagesschau, “Die Maßnahmen im Überblick”, 2022.9.6.
4) Tagesschau, “Preiserhöhungen wegen des Mindestlohns”, 2022.9.9. ifo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기업의 약 60%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5) Tagesschau, “Inflationsrate steigt im August auf 7,9 Prozent“. 2022.8.30.

독일 : 실업률 5.6%로 증가, 가을철 줄도산 우려하는 목소리도

연방노동청은 8월 독일 내 실업률이 5.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1)] 이는 전월대비 0.2%p 증가한 것이지만, 현재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비교적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집계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기존의 난민지원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됨에 따라 통계에 포함되어 실업률의 표면적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2)]

기업의 경영위기를 판단하는 일차적 지표가 되는 단축노동 신고 또한 8월 내 3만 6천 건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 8월 등록된 일자리는 88만 7천 개로 1년 전에 비해 10만 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현재까지 노동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3)]

그러나 몇몇 전문가는 가을 이후 높은 원가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회사들이 줄도산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화장지 제조업체인 하클레와 신발유통업체 괴어츠, 자동차 유통사인 독터 슈나이더 등 전통적인 기업들이 파산신고를 하여 주목을 받았다. 8월 기업파산율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다.[4)]

한편 로베르트 하벡 연방경제부 장관은 공영방송 ARD의 토크쇼에서 제빵업계 등 특정 분야에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현

상이 반드시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가 위기에 몰린 제빵업계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독일 제빵업계는 3분의 2 이상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오븐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원가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5)]

1) 실업자 수는 약 254만 7천 명으로 전월대비 약 7만 7천 명 증가하고 전년동월대비 약 3만 1천 명 감소했다.
2) Tagesschau, “Zahl der Arbeitslosen steigt um 77.000”, 2022.8.31.
3) Handelsblatt, “Kurzarbeit soll weiter leichter zugänglich sein”, 2022.9.1.
4) Tagesschau, “Droht ein Herbst der Pleiten?”, 2022.9.9.
5) Süddeutsche Zeitung, “Bäcker, Brötchen, Insolvenz”, 2022.9.7.

독일 : 연방내각, 2023년부터 조기퇴직자 소득제한 규정 폐지 추진[1)]

독일에서 조기퇴직자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했다. 사회법전 제6권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에 퇴직한 경우 연간 최대 6,300유로 이내의 추가 소득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조기퇴직자의 소득 상한액을 1년에 46,000유로로 조정한 바 있다.

한시적 지원정책의 만료시점에 맞춰 2023년부터 조기 퇴직자들이 추가 소득 제한 없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법전 개정법안이 내각의 결의를 거쳐 지난 8월 31일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다.[2)]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퇴직자가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회법전 제6권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부연금(Vollrente)[3)]을 수급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활동은 가능하나 연간 소득 상한액을 넘길 경우에는 연금 수령기간이 축소되거나 연금 수령이 취소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한 소득 상한액 확대규정이 만료되는 2023년 1월부터 다시 연간 6,300유로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동과 퇴직 사이 유연성을 더하여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인력과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Tagesschau, “Frührentner sollen grenzenlos zuverdienen können”, 2022.8.31.
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Entwurf eines Ach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2022.8.29.
3) 전부 연금(Vollrente)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급하게 되는 부분 연금(Teilrente)의 반대 개념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법에서 정한 연금액 전부를 수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 : 지역별 대중 교통비 지원정책[1)]

지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9유로 티켓의 시행기간이 만료되며 9유로 티켓을 대신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와 사민당은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49유로 티켓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녹색당은 주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29유로 정액권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독일교통사업자조합(VDV)은 69유로 티켓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연방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은 우선 요금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9유로 티켓의 후속 상품이 나오는 것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어떤 후속 정책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비 지원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몇몇 주 정부나 개별 운송사업자들은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지역 교통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면 지역 자치단체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9유로 티켓의 후속 상품을 발표한 지역인 니더작센 주의 뤼쵸우-다넨베르그는 9월부터 365유로 티켓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65유로 티켓은 365유로로 1년간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또한 바덴-뷔어템베르그 주의 켈 지역에서는 10월까지 2개월 동안 9유로 티켓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켈 지역의 9유로 티켓은 연방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디맨드 형태의 지역 교통 서비스인 개인 호출형 버스 'KEXI'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

베를린에서는 9유로 티켓을 대신할 지역 교통권이 최소 10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의 운수업체 대표자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통노조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이 자리에서 베를린의 새로운 교통권 가격이 결정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교통비 지원정책에 소요될 재원 확보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 3개월 동안 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9유로 티켓의 적용 기한 만료 이후, 지역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 티켓을 보유한 시민에 한하여 주말에 주 내에서 운영되는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우선 10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차원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이와 같이 각 주나 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한시적인 교통비 할인 또는 지원정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 Tagesschau, "Erste Nachfolger für das 9-Euro-Ticke", 2022.8.31.

영국 : 50세 이상 고용률, 인력난 국면에서도 급감한 것으로 밝혀져

영국 중고령층에서 "Silver Exodus"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대규모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8월 중순 영국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50~64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36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대비해 약 10%나 증가한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이어가면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중고령층의 규모도 37만 5천 명으로 팬데믹 발발 이전과 대비해 6만 5천 명 증가했다.

반면 2022년 5~7월 기준 영국의 노동시장 공석은 127만 4천 개에 이른다.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층 내에서는 노동시장 대이탈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중고령자의 고용률 하락이 무엇보다도 보수당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호소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실제 통계청에서 2022년 3월 발표한 중고령자 생활조사(Over-50s Lifestyle Study)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동안 퇴직하거나 해고된 50세 이상 인구 중 39%가 미래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The Guardian, "Number of Unemployed Over-50s Surges in 'Silver Exodus' from UK Workplaces", 2022.8.21.

영국 : 2023년 1월 연료빈곤율 65.8%으로 치솟을 것 … 학계의 비관적 전망

영국 요크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영국 전체 인구 중 65.8%에 달하는 4,50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특정 가구가 가구 순소득의 10% 이상을 연료비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에 지출할 때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 전망치는 10%대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영국 가계들이 부담하는 생계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비 지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에너지 빈곤 취약집단은 노령인구층이다. 노인 동거가구 중 86.4%가 겨울철 보온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도 에너지 빈곤율이 90.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요크대학교 연구진의 전망치는 민간 에너지 업체들이 각 가구에 부과하는 가스·전기료 상한액이 4,200파운드로 인상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가스·전기요금 상한액은 2022년 4월 1,277파운드에서 1,971파운드로 인상된 바 있으며,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 대규모 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1) The Guardian, “Two-thirds of UK Families Could Be in Fuel Poverty by January, Research Finds”, 2022.8.18.

영국 : 펠릭스토우 항만노동자, 8일간 전면 파업…그리고 추가 파업 예고

영국 최대 항구인 펠릭스토우항 부두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동월 30일까지 8일에 걸친 파업을 감행했다. 파업에 참여한 2천 여명의 노동자들은 12%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명목임금을 10% 인상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CK Hutchison 측에서는 7% 임금 인상과 더불어 500파운드 보너스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사용자 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감행했다.[1)]

펠릭스토우항은 영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영국 최대 항만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다른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영국 공급망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시 영국 공급망에 초래되는 혼란과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참여자를 대표하는 유나이트 측에서는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될 2차 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펠릭스토우항의 대안항 중 하나인 리버풀항의 노동자까지 9월 후순부터 연대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힌 상황이다.

1) Socialist Worker, “Striking Felixstowe Dockers Ready for Next State of Their Pay Fight”, 2022.8.30; The Guardian, “Hundreds of Liverpool Container Workers Set for Two-Week Strike”, 2022.9.19.

영국 : 영국 노총, 단체행동권 침해 이유로 ILO에 영국 정부 제소

영국 노총(TUC)이 영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최근 반노조 입법과 신규 법안을 통해 ILO에서 규정하는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 노총 측에서는 특히 2022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안이 사용자 측으로 하여금 파업노동자를 대체할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영국 노총에서는 리즈 트러스 신임 보수당 총리가 보수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가적 핵심사업 부분에서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점도 주요 ILO 제소 이유로 지목한다.[1)]

이번 영국 노총의 ILO 제소 건은 최근 냉랭한 노조-중앙 정부의 관계 구도와 관련이 깊다. 최근

10%대의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하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도, 유통, 보건, 통신, 법조,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임금 상승 및 노동조건 개선을 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맞서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취임 30일 내에 노동조합에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추가적인 노조 탄압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보수당 내각의 2인자인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 역시 "전투적인 노조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식의 규제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 The Guardian, "TUC Reports Government to UN Body over Attacks on Right to Strike", 2022.9.5.

프랑스 : 보육교사 채용 기준 대폭 낮춰 …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8월 4일 공개한 관보를 통해 오는 8월 3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기준을 대폭 낮춘다고 알렸다.

새로 개정된 방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보육이나 사회복지 관련 취업 자격증(CAP) 또는 직업 교육 수료증(BEP)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20시간 동안 직원을 동반한 내부 직업훈련 과정을 거쳤다면 혼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이를 통해 채용됐을 시 1년 이내 어린이 보육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춘 데에는 상당수의 보육기관에서 인력 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이 지난 2022년 7월 11일 공개한 어린이 보육시설 15,9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두 곳 중 한 곳(48.6%)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인력이 충원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함께 전문 보육교사 노동환경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Legifrance(2022), "Arrêté du 29 juillet 2022 relatif aux professionnels autorisés à exercer dans les modes d'accueil du jeune enfant", www.legifrance.gouv.fr/ (2022.8.11).
2) Cnaf(2022), "Restitution des résultats de l'enquête nationale "pénurie de professionnels en établissements d'accueil du jeune enfants»", https://www.cnape.fr/ (2022.8.11).
3) LePoint, "Créches : du personnel non diplômé bientôt recruté", 2022.8.10.

프랑스 : 실업보험 개편에 나서나

프랑스 노동부 올리비에 뒤솝트 장관은 지난 2022년 7월 26일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업급여지급방식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실업보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긍정적일 경우 제도를 강화해 실업급여 기준을 높여야 하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이 악화된다면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뒤솝트 장관은 크게 두 가지 안을 언급했다. 하나는 분기별 고용지수가 연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참고하는 방안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솝트 장관은 2019년 확정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1년에 시행한 현행 실업보험 체계가 2022년 11월 1일에 만기에 도달한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개편은 오는 10월에 다시 열리는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질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기간과 실업급여 감소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때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 Franceinfo, “Assurance chômage : Olivier Dussopt veut “durcir” les règles d’indemnisation lorsque l’économie va bien”, 2022.7.26.

프랑스 : 2022년 세계경제포럼 젠더 격차 지수, 15위에 머물러

2022년 7월 13일, 국제민간협력기구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1] 2006년부터 포럼이 해마다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세계 146개국의 경제 참여 기회 및 교육과 보건, 정치적 권한 등의 분야에서 양성평등 수치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프랑스는 연례 순위에서 2014년부터 꾸준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성평등 순위 15위에 머물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성별 격차는 68.1% 감소했고, 지금과 유사한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약 132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작년 동일한 연구에서 소요 기간이 136년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젠더 격차 순위는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했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세 단계 하락했다. 성평등 개선 문제는 마크롱 정부의 사회정책 부문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직업교육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은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보건과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각각 74%와 70%로 매우 높은 반면, 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26%와 16.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프랑스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제 혹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 평균 급여의 약 75%를 받고 있다. 혹자는 성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채용과 급여, 출산휴가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그에 걸맞은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 Le Monde, "La France peine à s'améliorer dans la réduction des inégalités femmes-hommes au travail", 2022.7.13.

프랑스 : 유럽 음식배달 플랫폼 Just Eat 프랑스 지사, 대규모 구조조정 감행

유럽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인 저스트잇(Just Eat)의 프랑스 지사는 최근 자사의 내부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 2021년 초 당시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 업체가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노동자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반면, 저스트잇은 플랫폼 노동관계를 임금노동관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18일 저스트잇의 대표적 노동조합 두 곳인 노동자의 힘(FO)과 노동총연맹(CGT)에 따르면, 저스트잇은 지금까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온 프랑스 도시 27곳 중 26곳에서 영업방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에 발표한 저스트잇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도시 20곳이 이에 해당했지만 규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노동자의 힘 대의원인 제레미 그라사 씨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800여 명의 배달원이 임금노동자로 고용되어 프랑스 파리에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대규모 인원 감축 이후에는 220여 명만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경영진에 따르면 파리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내부 조직개편과 "외부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이러한 조처에 따라 기존에 협상 중이던 고용안정계획(PSE)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배달 부문 350명의 임금노동자, 물류 지원 부문 40명의 정규노동자가 추가로 정리해고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4월 저스트잇의 자회사인 잇온라인(Eat on Line)은 국내 경제난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빌미로 279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1) Le Monde, “Just Eat annonce un vaste plan social, touchant 350 livreurs”, 2022.7.19.

프랑스 : 중앙은행, 내년 경제성장 침체 따른 노동시장 위축 전망

지난 2022년 9월 15일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3년 경제성장률이 0.5%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한 것에 비해 2%p 가까이 떨어진 수치이다.[1)]

그에 따라 노동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2분기 실업률은 7.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23년 들어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그 여파로 2024년에서는 실업률이 8%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경제성장세를 위축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정부 대응책 수준과 기간 등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2023년 경제성장률은 -0.5%~0.8%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적 관례를 따라 에너지 선물 시장의 가격세(8월 22일 기준)와 에너지 절약, 그리고 대체에너지 확보로 러시아산 에너지 원자재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상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하여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0.5%로 추정했다.

한편 경제성장률 침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에너지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다가오는 2024년의 경제성장률이 1.8%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또한 2023년에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정부에서 전망한 2022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중앙은행의 예측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23년 성장률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그 수치를 1%로 내다보며 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2)]

1) Banque de France(2022), “Projections macroéconomiques - Septembre 2022”,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 (2022.9.17).
2) Franceinfo, “La croissance française devrait ralentir à 0,5% en 2023, prévoit la Banque de France”, 2022.9.15.

프랑스 :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1)]

2022년 9월 8일 사회보장단체 말라코프 위마니스가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 요소와 노동자의 결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결근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노동자의 정신건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당사는 1,800명의 노동자를 설문 대상자로 채택하고 올해 5월 5일부터 5월 30일 사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노동자의 42%는 12개월 내 결근한 경험이 있었고, 이는 2019년 44%, 2016년 41%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병가를 낸 노동자 중 18~34세 사이 청년층과 여성의 수가 비교적 많았으며, 노동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병가 수는 더 적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목적의 병가를 제외할 경우, 노동자가 심리적 문제로 인한 업무 중단이나 직업적 피로로 결근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당 병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5%, 2021년 17%에 이어 2022년에는 2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직장에서 겪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나 "번아웃" 등으로 인한 청년층 노동자의 병가는 2016년 9%에서 2022년 19%로 급증했다. 이는 수면제나 진정제, 항우울제의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는데, 30세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소비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한 병가는 일반 감기나 독감을 포함한 일반 질병에 따른 병가에 이어 두 번째로 잦고, 기존의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병가를 제쳤다.

프랑스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장하는 세큐리테 소시알(La Sécurité Sociale)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가 증가에 따른 상병수당 지급률도 2019~2021년 사이에 매년 9.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례들을 제외해도 상병수당 지급률은 같은 기간 매년 5.9% 올랐으며, 이는 2015~2019년 사이 매년 4.5% 상승한 것보다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다.[2)]

1) Le Monde, "Absentéisme : préoccupation sur la santé mentale des salariés", 2022.9.8.
2) Le Figaro, "Quatre salaries sur dix en arrêt maladie en 2022", 2022.9.13.

프랑스 : 임금, 에너지 가격, 실업수당... 노조 단체 8곳 집단회의 진행[1)]

2022년 9월 5일, 프랑스의 주요 노조 8곳과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대표하는 단체 5곳이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 본부에서 집단회의를 가졌다. 노조마다 주요 안건과 방향성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임금 문제, 실업수당과 직장 및 교육기관 내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 의제로 상정했다. 필립 마르티네즈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올해 여름에 진행되었던 토론의 연장선에 있음을 밝혔는데, 지난 7월 12일에는 13곳의 단체가 "더 나은 부의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동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 단체가 복잡한 이해관계를 두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집단회의는 사회적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점을 두고 프레데릭 수이요 노동자의 힘(FO) 사무총장은 조합 상호 간의 회의는 결국 모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2022년 8월 31일 로랑 베르제 CFDT 사무총장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간 "전략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실업수당을 보장하는 실업보험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노조 대부분은 실업보험의 내용뿐만 아니라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조 측은 기존에 정부가 보험의 개혁을 위해 노조와 사용자에게 협상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개혁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실업보험체계 자체에 대한 변화와 검토를 주장했다.

1) Le Monde, "Rémunérations, prix de l'énergie, indemnisation des chômeurs... : les syndicats face aux dossiers cruciaux de la rentrée", 2022.9.5.

일본 : 적자 노선 폐선 등 대규모 철도 개혁 시작[1)]

일본에서 철도 민영화 이후 최대 규모의 철도 개혁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25일 수송밀도(하루 1km당 평균 여객 수송 인원수) 1,000명 미만인 적자 노선에 대해 중앙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철도회사 간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 협의를 시작하고, 향후 3년 이내에 각 지자체에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교통성은 "JR여객 6개사[2)]가 운영하는 노선의 57%가 폐선화 기준(수송밀도 4,000명 미만)을 밑돌고 있다."라며, 적자선을 유지하려면 지자체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여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선한 후 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화물열차와 JR 이외의 철도회사(사철)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동로치바(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등 일부 철도 노동조합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국토교통성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획 폐지를 요구했다.

1) 『月刊労働運動』, 「特集 : ローカル線切り捨て、国家改造攻撃を許すな！」, 全国労働組合交流センター、

2022.8., pp.8~16 및 『毎日新聞』, 「点字毎日 地方鉄道の存続を見直し 国交省の検討会が提言 輸送密度「1000人未満」で」, 2022.8. 14. 및 동로치바의 홈페이지 참조.

1) JR이란 철도 민영화 이후 기존의 국철을 대체하는 철도 기업이며, 지역별로 분할해 민영화했기 때문에 전국에 6개 회사가 별개로 존재한다.

일본 : 최저임금 최대 31엔 인상[1)]

지난 8월 1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올해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2)]과 관련해 A·B지역에서는 시급 31엔을, C·D지역에서는 시급 30엔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금액은 지난해 대비 3% 오른 961엔이다.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인상액이다. 이에 따라 도쿄의 최저임금이 시급 1,072엔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가나가와 1,071엔, 사이타마 987엔, 지바 984엔)이 그다음으로 높으며, 오키나와(850엔) 및 규슈 지역(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등 853엔)이 가장 낮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인상액이 너무 낮으며, 지역 간 격차도 벌어져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1) 『連合通信』, 「A·B 31円、C·D 30円、過去最高だが、課題残す」, 2022.8.2.
2)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일본 : 전자화폐로 급여지급 검토[1)]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전자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원래 일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 방침이 통과되면 기업은 라인페이나 페이페이 등 일본에서 이용하는 캐시리스(cashless) 서비스에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9월 13일 열린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종합정책추진국장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임금은 안전성과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화폐로 급여를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 측은 캐시리스 서비스가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캐시리스 서비스 파산 시 노동자 개인에게 100만 엔까지 보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증 상한금액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100만 엔을 보증할 방법이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이 방침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朝日新聞,「デジタル給与払い、残る不透明さ 識者「労働者にメリット少ない」, 2022.9.13.

일본 : 아마존 하청업체 배달원노조, 두 번째로 결성돼[1)]

일본 아마존의 하청회사로부터 화물 배달을 위탁받아 일하고 있는 나가사키 시의 배달원들이 9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 배달원조합 나가사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아마존 측과 하청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는 노동자이며 업무위탁계약은 위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계약 체결, 장시간 노동 폐지, 일당 인상, 배달원이 부담하고 있는 유류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배달원들의 직장 단위 노조 결성은 요코스카 지부(가나가와 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요코스카 지부는 지난 6월 아마존 재팬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하청업체는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여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합의해 노동환경을 개선했지만, 아마존 재팬은 이들이 본사의 노동자가 아닌 위탁업체의 직원이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측은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도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노조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 朝日新聞,「業務委託契約は偽装」アマゾン配達員が長崎で労組 環境改善目指す」, 2022.9.5.

브라질 : 재택근무로 정신질환 위험성과 노동시간 증가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잡은 재택(원격)근무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서비스 센터 핑네크(Fhinec)가 경제지 발로르 이코노미오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에서 2022년 5월 사이 노동자의 디지털 소비 활동시간이 85%나 증가했으며 근무시간 또한 6.7% 증가해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츠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행한 업무도 20%나 늘었고, 온라인 화상회의는 팬데믹 이전보다 78.4%나 증가했다. 링크드인이 2021년 11월 재택근무와 정신건강의 연관

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근무로 전환했던 사람들의 62%가 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연구자는 최근 상원에서 승인된 재택근무 개정안(N. 1108)을 언급하면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3일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생산 또는 작업 시간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나 작업 인프라는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작업 준비나 대기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1] 재택근무의 폐해를 정신 건강 측면에서 언급한 심리학자 에르난 비라르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욕구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살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는 잘못된 자유 의식이고 자기 착취를 강화하는 기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일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

1) Agência Senado, “Aprovada MP que regulamenta teletrabalho e muda auxílio - alimentação”, 2022.8.3.
2) CUT, “Home office aumenta jornada e trabalhador sofre mais com doenças mentais”, 2022.8.18.

브라질 : OECD 가입 절차 착수

OECD 가입을 위한 브라질의 준비가 본격화된다. 2022년 6월 OECD 이사회가 브라질의 가입 여부를 다루는 로드맵을 승인하면서 브라질도 이에 발맞추어 가입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70년대 후반 OECD 철강위원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1990년대부터 협력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오다가 2017년 5월 OECD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브라질은 앞으로 OECD가 요구하는 규약 준수나 의무사항에 맞게 국내 법률,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가입 로드맵이 이행되는 기간은 약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는 2022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은 브라질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좋은 정책과 관행을 받아들이고 선진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브라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OECD가 강조하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경제, 세제 시스템의 효율성 및 분배 정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의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1]

1) Ipea(2022), “Acessão do Brasil à OCDE : Efeitos sobre Indicadores Econômicos e o Caminho à Frente”, http://repositorio.ipea.gov.br/ (2022.8.25).

브라질 : 생산과 고용 증가로 경제 회복세

브라질 통계청(IBGE)은 2022년 2분기 가구 표본조사(Pnad Contínua)를 통해 생산과 고용 증가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억 83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9,830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3.1%(약 300만 명), 전년동기대비 9.9%(약 890만 명) 늘었다. 2022년 2분기 고용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로 공공부문 관련 분야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2년간 활동이 중단되었던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업무가 재개되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이 고용률 증가의 이유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상업, 차량 및 오토바이 수리 부문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실업률은 감소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업률은 9.3%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14.2%) 4.9%가 감소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1)]

1) Agência IBGE, “PNAD Contínua : taxa de desocupação é de 9,3% e taxa de subutilização é de 21,2% no trimestre encerrado em junho”, 2022.7.29.

브라질 : 비정규 간헐적 고용형태 무분별 사용에 제동

앞으로 위법한 간헐적 고용형태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지역의 노동법원은 기업이 간헐적 고용형태를 악용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노동자에게 휴가, 연말 상여금, 사전 해고통지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간헐적 노동은 2017년 이후 합법화되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시간 만큼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일한 기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형태이다. 금융 일간지 발로르 이코노미코에 따르면, 산타 카타리나 지역 노동법원(TRT-SC)은 샨셰레(Xanxerê) 기업의 아웃소싱 업체가 학교 급식 노동자와 간헐적 고용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노동자가 1년 6개월 동안 매일 출근해 같은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회사에 6천 헤알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파라이바(Paraíba)에서는 노

동법원(TRT-PB)의 1심 판결에 따라 트럭 하역 부문에서 일했던 간헐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급여지급 방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회사가 매월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했기 때문에 간헐적 고용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마조나스 노동법원도 간헐적 계약을 맺었지만 풀타임으로 일해 왔던 정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했고, 회사로 하여금 노동자의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일반 고용 및 실업자 등록(Cage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간헐적 고용 노동자는 약 84만 2천 명이다.[1)]

1) CUT, "justiça anula contratos intermitentes e obriga patrões a pagarem verbas rescisórias", 2022.9.9.

브라질 : 메르세데스 벤츠 3,600명 정리해고

상파울루 주 상 베르나르도 두 캄푸에 위치한 독일계 자동차기업 메르세데스 벤츠 노동자들이 9월 9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9월 6일 사측이 생산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9천여 명의 노동자 중 약 33%인 3,600명을 해고하고 공장 부서 일부를 아웃소싱하겠다는 발표가 난 이후다. 해고 대상은 물류, 유지보수, 공구, 차축 제조 및 트럭 변속기 분야 노동자 2,200명과 2022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시직 노동자 1,400명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진하려는 대량해고는 2019년 포드, 2022년 도요타의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 이후 세 번째다. 65년 동안 브라질에서 자동차 공장을 운영해 왔던 벤츠사는 2021년 이라세마폴리스 지역의 고급자동차 생산공장을 중국의 자동차업체 장성기차에 매각했으며, 2022년 초에는 부품 부족으로 600명의 노동자의 집단휴가를 실시했다. 벤츠사는 구조조정의 이유로 8년 동안 적자가 지속되어 재정압박이 크고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전환 과정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9월 13일부터 경영진과 버스 및 트럭 생산모델의 구조조정 및 해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1)]

1) UOL, "Funcionários da Mercedes-Benz fazem greve após anúncio de 3,6 mil demissões", 2022.9.9.